

“김 지사 내란방조 의혹 행적 철저 조사”

이희성 민주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 “12·3 사태 당시 지휘부의 지시에 순응했는지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김관영 지사의 '내란의 밤' 행적에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 다름이 아니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희성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2차 종합특검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게 됐다”며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지자체의 동조 혐의도 포함된다.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냈는데 그동안 갈고닦은 경험을 되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민주의

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 사람 역시 불의한 사람인 것이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김관영 지사께서 12.3 불법 비상계엄당시 내란에 저항했는지 아니면 말로는 반헌법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안부 등 내란지휘부의 지시에 순응했는지 반드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김 지사의 '내란의 밤' 행적의혹

지적과는 전혀 무관한 입장으로 분명한 선을 긋는 한편 이는 순수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권력남용과 헌정질서 파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가능할 중대한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란의 진실'과 '정치부패' 중 무엇이 유권자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 특검은 그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단순한 수사작주의 의미를 넘어 한국 헌정사와 정치사에 분수령이자 갈림길로 기록될 사건이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12.3불법계엄 당

시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주당 소속 종합특검대응 특별위원회에서 35사단과 협조 체계와 일선 지자체 전달여부를 비롯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가려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이른바 12.3불법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수뇌부의 내란음모로 밝혀진 만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지자체의 순응여부도 가려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민주당 소속 2차 종합특검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철저히 가려내고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2025년 9월부터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총 작기소세움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 지지층 결집 행보

혁신당 조국 대표 장수·정읍·익산 찾아 도민들과 밀착 소통 나서



통해 지역 현안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50분 경 정읍시 중앙 1길에 위치한 김민영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게 되면서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전북 지역을 찾아 대대적인 민심 청취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하루 동안 장수군 정읍시 익산시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주민 및 지지자들과 밀착 소통을 이어갔다.

조국 당대표는 장수군 내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하고자 15일 오전 10시 장수시장 방문으로 문을 열었다.

장수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장수읍 노인회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예방하고, 이어 장수교회, 장수버스터미널 장수상당 앞에서 지역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조 대표의 장수 지역 순회 일정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수시장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보탤다.

마지막 행사자인 익산에서는 문화와 소통이 어우러진 행사가 진행됐다.

오후 4시 40분부터 익산 시내 브런치 카페에서 '조국의 선택' 사회회를 통해 독자들과 만남을 가진 뒤, 오후 5시 20분부터는 '실립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전북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 대표의 전북 방문은 전북지역 거점 도시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01만호기자

“전주-김제 행정통합 논의, 정치적 계산·지역 이기주의 결합된 결과”

혁신당 군산·부안 지역위 “지역 주도권 확보하려는 발상 새만금 권역 행정통합 통한 ‘트레시 추진’ 우선돼야” 강조

조국혁신당 군산·부안 지역위원회가 전주-김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군산시·부안군 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전주시와 김제시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전략이 아닌 정치적 계산과 지역 이기주의가 결합된 결과”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두 지역 당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성수 부안지역 위원장과 이주현 군산지역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김제는 새만금과 직접 맞닿아 있는 도시로 군산·부안과 함께 새만금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상황에서 김제가 전주권 편입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를 먼저 꺼낸 것은 지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솔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이 대규모 기업 투자와 신산업 유치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서, 군산·김제·부안이 협력해야 할 때 오히려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통합 논의가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의 행정통합이 특정 도시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정치 프로젝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전주-완주 통합이나 전주-김제 통합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새만금 권역의 행정통합을 통한 ‘새만금트레시’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주시를 향해서도 “과거 완주군과의 통합 추진이 무산된 뒤 성찰 없이 통합 대상을 김제로 바꾼 것은 전북 발전 전략이 타기보다 정치적 외연 확장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군산·부안 지역위원회는 “현재 제기된 전주-김제 통합 논의



조국혁신당 군산시·부안군 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김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새만금의 권리와 전략적 이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주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은 전주시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지역이 아니라 군산·김제·부안이 함께 만들어 온 전북 공동의 미래이자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새만금을 흐드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

면 군산·부안 주민과 전북도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전주와 김제간의 통합 논의도 전주와 완주간의 통합 논의 못지않게 각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쉽지 않은 지난한 통합 추진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했다. /01만호기자

세수 변동 등 발생시 정부 추경 의무 편성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세수 변동이나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입예산 대비 세입 실적의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 목표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세수 결손

과 예산 불용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감이나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기능이 보다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기자·정읍=김대환기자

지방의원 정치 참여 확대... 도의회,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사퇴 없이 동일시·도내 시·도의원직 유지 출마 지방의회 의정 공백 방지 지방자치 활력 제고 기대



“군산조선소 9년 만에 새주인 찾는다”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조선소가 9년만에 새주인 찾아 원전 재가동을 시작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일시·도내에서는 시·도의원직을 유지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환영했다.

도의회(의장 문승우)는 광역·기초의원 및 시장·군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시법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 시 사직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6·3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퇴 요건 완화로 의정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불합리한 시법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공을 기울인 결과”라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 활성화는 물론,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사 윤준병 의원 등을 만나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통한 지역 대표성 보장을 건의하기도 했다. /01만호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정책 멘토단’ 출범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의 미래 정책을 설계할 ‘정책 멘토단’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정책을 설계하고 종합할 간사 윤준병 의원 등을 만나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통한 지역 대표성 보장을 건의하기도 했다. /01만호기자

조·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전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전주의 자원과 전략을 분석해 전주만의 콘텐츠와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멘토단은 현재 전주시정을 “시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며, “시장 중심의 시장주의”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주의’의 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01만호기자

일자리·에너지·바이오 ‘산업 대전환’

김대중 정읍시장 예비후보



김대중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공공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에너지 산업 바이오 창업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일터와 산업’ 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김 예비후보는 먼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주도 일자리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시 출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관광재단 등을 설립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3년 내 공무원급 일자리 300개에서 최대 500개(기간제 포함)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기관 채용 시 지역 인재 50% 이상을 의무 채용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환경 문제 해결과 에너지 산업 육성을 결합한 정책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한계 농지를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해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햇살 연금’을 도입하고, 축산 도축 취취지역에는 IoT 기반 악취 감지 센서 1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신장동 3대 국책연구소가 보유한 미 활용 특허를 지역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 바겐세일’을 추진하고, 연구소 박사과 청년 창업가를 연결하는 ‘기술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01만호기자·정읍=김대환기자

“네거티브 중단하고 정책·비전 경쟁하자”

한득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한득수 임실군수 출마예정자가 최근 불거진 ‘성수산 가든 식사’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 정치 중단을 촉구했다.

한 출마예정자는 지난 13일 임실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는 후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싸움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바꿀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정책 중심의 선거를 제안했다. 그는 논란이 된 ‘성수산 가든 식사’와 관련해 “자신의 초대를 받아 참석해 인사만 나눴을 뿐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식사비 역시 각자 계

산했고, 자신이 먹은 밥값만 정당하게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약 참석자들에 대한 편이로든 식사비를 대신 냈다면 군수 출마를 포기하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입부에서 해당 사안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민·행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01만호기자·임실=진홍영기자